

2019 강한시민사회 3차 포럼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  
“단체 중심의 시민사회는  
무엇으로부터 도전받는가?”

2019년 5월 16일 (목) 14:00~16:3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 소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항상 지원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올 한해 수단법인 시민과 공동으로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8회의 연속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강한시민사회포럼'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담론형성
- ②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의 방향과 전략 논의
- ③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의 구체적 과제 도출
- ④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지지 확보

그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7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모색과 연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 워크숍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한 흐름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공동으로 실천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19일에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 포럼은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인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제언: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의 제언을 주요 발제로 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고 실천과제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9 강한시민사회포럼'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 “단체 중심의 시민사회는 무엇으로부터 도전받는가?”>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사회의 조직형태, 활동방식 등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1) 시민사회의 주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진단)와 2)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과제) 함께 이야기 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의 여러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모시기 위해서 여섯 분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토론자를 모시게 되었고, 변화에 관한 다양한 시각 속에 치열한 쟁점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9 강한시민사회 3차 포럼

#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 “단체 중심의 시민사회는 무엇으로부터 도전받는가?”

- ◆ 좌장 : 임현진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 발제 : 김병권 / 서울시 협치자문관  
 <시민사회지형 변화에 따른 쟁점과 도전 - 거시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조직 발전전망>
- ◆ 토론 : 김경민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우성희 / <독립활동가의 시대> 활동가  
 권오현 / 슬로워크 대표, 빠띠 설립자  
 김태호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주)나눔발전소 대표이사

### □ 세부 일정

시간	등록	
14:00~14:05	등록	
14:05~14:10	포럼 소개	서울시NPO지원센터
14:10~14:15	인사말	임현진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4:15~14:45	발제	김병권 / 서울시 협치자문관 시민사회지형 변화에 따른 쟁점과 도전 - 거시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조직 발전전망
14:45~15:45	토론 I	김경민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조직 운동의 사회적 가치, 시민사회단체의 조직화된 운동의 성과와 한계
	토론 II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대변 운동에 대응하는 당사자 운동이 갖는 의미
	토론 III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정형화된 조직 체계가 아닌 솔루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토론 IV	우성희 / <독립활동가의 시대> 활동가 정형화된 조직 체계가 아닌 독립활동가의 형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토론 V	권오현 / 슬로워크 대표, 빠띠 설립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권력'과 이들이 활동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론 VI	김태호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주)나눔발전소 대표이사 시민단체의 생성, 성장, 소멸, 전환 / 시민사회단체 조직형태 변화의 경험
15:45~16:30	질의응답 / 플로어 토론	



# 목 차

발제. 시민사회지형 변화에 따른 쟁점과 도전 - 거시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조직 발전전망	1
김병권 // 서울시 협치자문관	
토론1. 조직 운동의 사회적 가치, 시민사회단체의 조직화된 운동의 성과와 한계	27
김경민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토론2.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대변 운동에 대응하는 당사자 운동이 갖는 의미	31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3. 정형화된 조직 체계가 아닌 솔루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35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토론4. 정형화된 조직 체계가 아닌 독립활동가의 형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39
우성희 // <독립활동가의 시대> 활동가	
토론5.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권력'과 이들이 활동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45
권오현 // 슬로워크 대표, 빠띠 설립자	
토론6. 시민단체의 생성, 성장, 소멸, 전환 - 시민사회단체 조직형태 변화의 경험,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례	51
김태호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주)나눔발전소 대표이사	





## 발제

### 시민사회지형 변화에 따른 쟁점과 도전

#### : 거시적 관점에서 시민사회 조직 발전전망

김병권 | 서울시 협치자문관

- I. 배경: 새로운 가능성
- II. 시민사회 전망을 위한 접근법 재론
  1. 사회를 이루는 세 개의 기둥과 시민사회
  2. 세 기둥의 역사적 변화
  3. 일상의 삶에 대한 조직화
  4.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재론
- III. 시민사회 조직화 방향
  1. 시민사회 조직의 현재
  2. 전문가 의존적 시민사회 조직화
  3. 자원동원 전략관점에서의 시민사회 조직화
  4. 온라인 조직화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5. 생활지역 기반 커뮤니티 조직화
  6. 공론장의 조직
  7. 정체성의 조직
- IV. 결론: 개인은 조직되어야 한다.

### I. 배경: 새로운 가능성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의 시간적 역사가 비록 서구에 비해 짧지만 그 역동성과 변화 무쌍함은 세계적인 반열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정치사회적, 경제적 우여곡절의 시기에 시민사회가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례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민사회의 꾸준한 영향력 확대나 참여회원의 증가가 더 진전되지 못한 채 답보해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의견들도 많다. 또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행정)과의 협력관계 급팽창이라는 최근의 움직임 탓에 시민사회가 단순한 행정 보조자로 격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다. 물론 시간 변화에 따라 과거 성장을 구가하던 시민단체가 쇠약해지기도 하고, 기존에 보이지도 않던 커뮤니티들이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므로 시민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지 쇠퇴하는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치정당이나 정부, 시장사회가 시민사회의 압력을 이전보다 덜 느낀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보면 요즈음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진화가 확실히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시장화의 거센 압력아래 국가는 물론 시민사회가 잠식당하면서 시민사회가 점해야 할 역할과 공간이 크게 줄어든 것이 세계적 추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견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내외적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시민사회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 성장의 기회와 가능성이 넓어질 여지마저 엿보인다. 그 계기의 하나가 바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포퓰리즘 경향’이다.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Chantal Mouffe)에 따르면, “포퓰리즘적 계기’는, 빠르게 증가하는 불만족스러운 요구들로 인해 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 전환에 대한 압박에 처한 지배체제모니가 불안정해진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제도들은 기존 질서를 지키면서 대중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따르도록 지켜내는데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시급한 것은 포퓰리즘 계기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가 또한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샹탈 무페 2018)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질서를 재배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구성하는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실 포퓰리즘이 부상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의 정치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부분,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들과 떨어진 ‘엘리트들의 정치’, ‘전문가들의 정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에서 진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무페에 의하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란 당파적 대립이 아니라 공공 사무에 대한 중립적 관리라는 생각에 따라 정치를 기술관료적 형태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공간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당파적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중립적 영역에 있는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으로 정치를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샹탈 무페 2018)

그 결과,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 기획들 사이에서 실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의 역할은 그저 전문가들이 고안한 ‘합리적’ 정책들을 승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는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중앙정치에서는 뚜렷한 것 같다. 이를 두고 토마 피케티가 현재 미국정치의 민주당-공화당 대립구도를 일컬어,

시민들로부터 멀어진 채 엘리트 정당(민주당)과 부자정당(공화당) 사이의 경합이라고 비판했지만, 한국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피케티 2018) 다만 2016년의 촛불운동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고, 극히 제한적으로 청와대 청원운동이나 공론장 개최 등 때문에 착시현상이 있지만, 현재 한국 정치와 정당들도 시민들과 호흡하지 못한 채, 전문가들 사이의 정책 미세조정이나 개인적인 재선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즘이란 바로 이런 정치문화의 변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엘리트들에 의해 박탈당해온 목소리를 ‘대중에게 되돌려’주겠다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국수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득세한 것이라고 무폐는 평가한다. 이 대목에서 시민사회가 시민의 불만을 민주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조직함으로써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전문화되고 기능화된 정치사회가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시민들의 진정한 불만과 분노를 제대로 듣고 담아내고 조직해내면서 자신의 발전적인 에너지를 충원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이 기존의 국가나 시장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표출되든, 아니면 협력과 협치로 구현되든, 그 이전에 시민들을 시민사회 안으로 소통시키고 조직해냄으로써 해결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 때 인 것 같다. 이런 작업을 먼저 하기보다 시민사회의 기능의 우선순위를 열거하거나 공적 자원의 배분 문제에 집착하거나 제도배열에 몰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 II. 시민사회 전망을 위한 접근법 재론

### 1. 사회를 이루는 세 기둥과 시민사회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state or public sector)와 시장(market or private sector), 그리고 시민사회(social society or communities)로 구성되는 사회의 세 기둥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IMF 수석 경제학자이자 2013~2016년에는 인도 중앙은행 총재까지 했던 라구람 라잔(Raguram Rajan)도, “시장이 약화되면 사회가 비생산적이 될 수 있고, 커뮤니티가 약해지면 사회가 패거리 자본주의로 향하게 되며, 국가가 위축되면 사회가 차갑게” 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반대로 “시장이 과도해지면 사회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커뮤니티가 과하면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국가가 비대해지면 권위주의로” 흐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세 기둥의 균형을 강조한다.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격차가 심해진 것도 균형의 붕괴 때문이라고 지목하면서.(Raguram Rajan 2019)

사실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 세 개의 기둥이 모두 필요하다는 진단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길게 보면, 시장은 국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경제는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분석한 칼 폴라니의 통찰도 있지만,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수 없이 제기되었던 이슈이기도 하다. 예들 들어 “사회가 집합적 행위를 가장 광범위한 자원에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국가가 강제력으로 규칙 및 법규를 실행하는 방법, 시장에서 내려진 개별적 결정들의 비의도적인 결과들을 수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발적 행위, 토론, 합의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통하는 방법이 그것이다.”(에드워즈,2004)

특히 세 기둥 가운데에서 “시민사회는 경제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으로서, 무엇보다 친밀한 영역(특히 가족), 결사체(특히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 사회운동, 공적 의사소통의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근대 시민사회는 자기 구성과 자기 동원의 형식을 통해서 창조된다.”(코헨과 아라토, 1992) 그리고 월쨈의 정의를 빌리면 “우리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천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꼭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그 영역을 정의한다. “시민사회는 강제되지 않은 인간 결합의 공간과 이 공간을 채우는 - 가족, 믿음, 이익, 이데올로기를 위해 형성된- 관계의 네트워크의 집합”이다.(월쨈 2008)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애매한 대목을 확실히 해둬야 할 지점이 있다. 첫째로, 시민사회를 단순히 사회운동 공간이자 운동주체 형성의 장으로 보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시민들의 중요한 삶의 영역’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자연의 생물이 신진대사를 위해서 태양과 공기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시민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은 물론 강건한 시민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민들은 시장의 거래나 국가의 공적 서비스 그늘 아래서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결사나 관계, 활동들은 그를 구체화하는 특정한 행동양식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시민사회는 아니다. 마치 시장이라는 넓은 영역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이 조직되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지만 이들이 곧 시장은 아닌 것처럼.

둘째, 시민사회를 당위적이고 도덕적으로 부여받은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치 국가와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는 영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역사적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경합하고, 한편에서는 협력하면서 끊임없이 상대적 위상들을 달리 만들어왔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면서 시장의 과도한 팽창과 국가, 시민사회의 위축은 예기치 못한 시민들의 삶의 위협을 발생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단지 시민사회단체 회원 확대나 영향력 확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전체적 반경 가운데에서 시민사회영역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함으로써 그 영역 안에서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로, 시민사회에 대해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전체 사회 구성가운데 국가와 시장이 소외시킨 잔여 공간(residual sphere)으로 파악하지 말아야 한다. 거꾸로 18세기 이전 도시공동체에서 형성된 시민사회라는 통합 범주에서부터 정치공동체와 시장경제가 서서히 분화되어 나온, 어쩌면 시민사회야말로 근대 인간사회 전체의 근원 뿌리 같은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공간과 그 안에서 이뤄질 삶의 가능성은 잔여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있고, 무한히 개발될 전망성이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를 근대 이후 우리 삶의 발원지로 간주한다면, 우리의 생활구성 요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자치적으로’ 시민사회 공간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세 기둥의 역사적 변화<sup>1)</sup>

그렇다면 간단하더라도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근대 이후에 어떻게 서로 상대적인 지위를 변화시켜왔고, 202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은 어떤 단계에 와 있으며 어떤 방향의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요약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여기서 대부분의 과거 분석들은 시민사회는 생략하거나 주석정도로 처리하고 국가와 시장의 관계변화만 다뤘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사회를 또 하나의 축으로 놓고 3자의 상대적 지위변화를 다룰 필요가 있다.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시기라고 하는 19세기 중반까지는 자유시장이 우위를 점하고 국가가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에 개입을 삼가는 야경국가였다는 역사기술은 술하게 많다. 그리고 이 시기의 시민사회란 사실 주로 도시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경제를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장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자신의 영역에서 밀어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편으로는 도시공동체 안이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길드 조직과 농촌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면서 성장한다. 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입장에서 볼 때 “공동체는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전망을 선택하는 데 장애였고, 족쇄로 여겨졌을 뿐”이며, 공동체를 대신한 “이상적 형태로서의 시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절해주는 기제”가 되었다.(최정규 2017) 하지만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원자화된 개인들이 오직 시장에서 소비자이자 노동력 공급자로서 거래 관계로 만나는 그런 사회는 19세기 중반부터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빈곤층이 생활과 삶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시장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간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1) 이 절은 생협평론 33호(2018년 겨울)에 기고한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 가능성”의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 결과 시민들은 시장 밖에서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결사체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1800년대 초부터 모습을 갖춘 노동조합, 1844년에 최초로 설립된 로치데일협동조합, 1850년 독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을 필두로 다양하게 출현했던 서구의 공제조합과 상호부조 단체들이 그것이다. ‘시장으로 가득 찬 세상’ 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좋은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자 시민들이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자구적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19세기 후반기에 시민사회는 시장경제와 분리되어 자신만의 ‘사회적 영역’ 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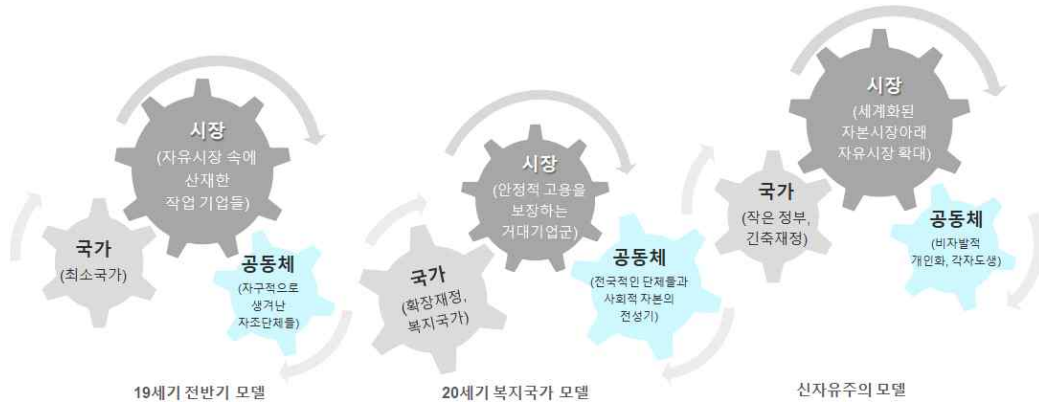
그런데 19세기 말 시장경제 안에서 거대기업이 탄생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석탄, 석유, 전기 동력이 강력해지고 철도 등 유통망이 발달하자 서구 기업들은 기존의 원료 조달, 유통, 영업, 금융 등 시장거래에 의존하던 영역을 기업 안으로 내부화(internalize)한다. 그 결과 단일 기업에서 자본과 원료 조달부터 생산, 마케팅, 유통, 심지어 도소매까지 경영 지휘 체계로 모두 총괄해내면서 기업의 몸집은 커져갔다. 나중에는 거듭되는 인수 합병을 통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은 수만, 수십만의 직원을 전 세계에 배치하고 고도로 분화된 경영 조직을 거느린 막강한 군대 조직처럼 변화되었다. 그 결과 “경영이라는 보이는 손이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을 대체해버린다.(알프레드 찬들러 1977)

한편 20세기를 거대기업시대로 장식할 동안 ‘작은 국가’ 도 몸집을 키울 준비를 한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가 사회복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20세기 초반에서 1929년 대공황 전후 시기까지 주요 선진 국가들은 한편에서는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실업과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한편에서는 부상하는 대기업 시스템을 뒷받침할 포괄적인 교육과 보건, 교통과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등 대규모 산업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큰 국가, 복지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과 농민단체 등 시민의 자주적 조직들도 기업과 국가의 대규모화에 비례하여 전국적인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19세기의 크고 작은 공제조합이나 상호부조 단체들을 대체해나가기 시작한다. 이처럼 기업과 국가, 시민사회 모두에 걸쳐서 거대 조직으로 대표되었던 시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알려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197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반전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시작된다.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별적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 There’s no such thing as society. There are individual men and women and there are families.” )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열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1987년에 했던 인터뷰의 한 구절이다. 신자유주의로 시장이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을 급격히 잠식해 나가는 한편, 국가운영과 시민사회 운영원리에 기업모델을 강제하는 사태까지 진전되면서 시장 압도적인 우위 사회, 모든 영역과 조직이 기업을 닮은 사회로 변한다.(푸코 1979) 거대조직들의 시대는 사

라지고 기업의 슬림화 현상과 외주, 체인화, 하청으로 조각나게 된다. 국가는 작은 정부를 강요받는다. 시민사회는 인적 물적 자원의 고갈로 급격히 해체된다. 시민들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각자도생의 경쟁구도로 들어가게 되고 기나긴 ‘관계의 결핍’ 시대를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세계적인 불평등이 있다.

<그림1>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의 상대위상 변화의 역사적 단계



한국의 경우에는 위의 세 단계가 거의 1960년대 산업화시기부터 시작되어 수십 년 만에 완료되고 선진국들과 닮은 신자유주의 끝점에 와 버렸다. 결국 현재 시민사회에 대한 고민과 성장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과잉팽창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질식 상태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라잔이 표현한 세 기둥의 균형상태 붕괴와 재 균형도 마찬가지다.

### 3. 일상의 삶에 대한 조직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시민들에게 좋은 삶을 약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진 지금,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와 시장, 특히 시민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재균형화 될 것인가? 일부에서는 1950~1960년대 경제 성장과, 평등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다 함께 번영했던 복지국가의 시기로 되돌아갈 것을 희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절과 비교해 지금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이었던 대기업의 안정적 고용 보장 체제가 상당히 허물어져버린 지금, 국가복지가 기업복지와 결합되어 시민의 좋은 삶을 책임지는 모델을 재현하기는 여러모로 쉽지 않게 되었다. 거대기업 - 거대국가 - 거대시민사회 모델은 부활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영국 보수당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처럼, 긴축 재정을 핑계로 작은 정부를 그대로 놔둔 채, 시장의 실패를 오로지 ‘시민 공동체’로 채워

넣으려는 시도 역시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거시적인 경제 조정이나 자원의 재분배 그리고 시장의 규제는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며, 또한 시민 공동체와 커뮤니티의 발전은 오직 국가의 강력한 뒷받침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역할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세 기둥 사이의 새로운 재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시민사회 그 자체의 제자리 찾기와 조직화를 고려하기에 앞서, 변화된 시민들의 현황을 진단하고 시민사회가 떠안아야 할 영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의 대대적 확장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동시 질식이 시민들의 삶에 초래시킨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는 안정적인 관계의 해체, 안정적인 삶의 소멸이지 않을까 싶다. 안정적인 직장의 소멸은 안정적 소득의 소멸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구조 변동으로 나타난 1인 가구 급증으로 기존 가족관계의 해체에서도 재연된다. 우리 사회는 2015년 이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2인 가구 비중(26%)까지 합하면 전체 가구 유형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전에 없이 불거져 나온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국가가 적합할 것인지, 시장이 적합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가 떠맡아야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유실된 관계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삶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회복도 중요하지만 특히 시민사회 영역이 광범위하게 관계 만들기와 안정성 회복하기 과제를 안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시민들이 서로 자조적 결사를 이루면서 상호도움을 주면서 국가나 시장에 대해 일면 비판과 견제, 일면 회복을 위한 협력행동을 진행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마을 공동체운동이나 사회적경제 만들기 등과 같은 사회혁신운동이 일정하게 여기에 부응하려는 노력이었지만, 아직은 근본 처방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대중처방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삶의 영역에서 시민을 조직화해나가려는 시도의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지도 못했다. 다시 한 번, 현재 시점에서 시민 삶이 어떤 영역을 비 정부적이고 비 시장적이며 ‘자율적 결사’에 의한 상호주의 관계로 풀어야 할 것인지 부터 진지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옛날식의 시민단체를 재건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 4.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재론

민주주의는 시민사회 존재의 원천이자 영원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조직된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의 근본동력이라는 주장은 시민사회 안에, 결사체 민주주의 안에 민주주의 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위기는 곧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시민사회의 약화는 민주주의 쇠락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반독재 민주주의’로 짝을 이뤄 인식되었다. 그러다 보니 독재가 사라진 지금, 그 잔여세력들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는 것 말고는 민주주의는 이미 확보한 것이고 시간에 따라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길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구 선진자본주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어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만 온 것이 아니라, 글로벌 ‘민주주의 침체(democratic recession)’왔다면서, 1970년에 35개밖에 안되었던 선거민주주의 국가가 2000년대 초에 120개 국가로 팽창해왔지만, 2007년 이후 정체내지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Larry Diamond 2015) 한국의 박정희 정부와 같은 독재정부 때문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른바 ‘포퓰리즘’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치 포퓰리즘을 그냥 트럼프처럼 우익 정치선동가의 부상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기존의 정치엘리트 집단이 시민들로부터 계속 멀어져간 결과, 시민들이 기존 정치를 총체적으로 불신하는 분위기의 확산 때문이라고 볼 때, 확실히 포퓰리즘은 기존 민주제도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 같다. (Cas Mudde, “The Populist Zeitgeist“ 2004)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포퓰리즘도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파생 결과의 하나로 해석한다면, 현대 민주주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장화로부터 유래한다고 봐야 하고 한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는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 심지어는 시민사회까지도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신자유주의는 ‘효율’을 앞세워 공정을 파괴하고 시민참여를 억제하며 정치협오를 부추기고 결국 포퓰리즘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 결과 현대 민주주의는 ‘최대다수의 최소참여(Maximum level of minimal participation)’로 굳어진다. “유권자의 무관심을 우려하면서 투표시간을 늘리고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당원 감소를 걱정하면서 지지자달이 다윈 가입서를 쓰도록 독려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벌인다는 해결책을 내놓는다. 물론 당원이 실제로 되었을 때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콜린 크라우치 2005)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시민사회는 경제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으로서, 무엇보다 친밀한 영역(특히 가족), 결사체(특히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 사회운동, 공적 의사소통의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위기는 곧 시민사회의 위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코헨과 아라토 1992) 사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적 인적 자원 동원 문제는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공공사업을 영리화시킬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조차도 이제는 “기업이야말로 비영리 활동을 후원해 줄 잠재적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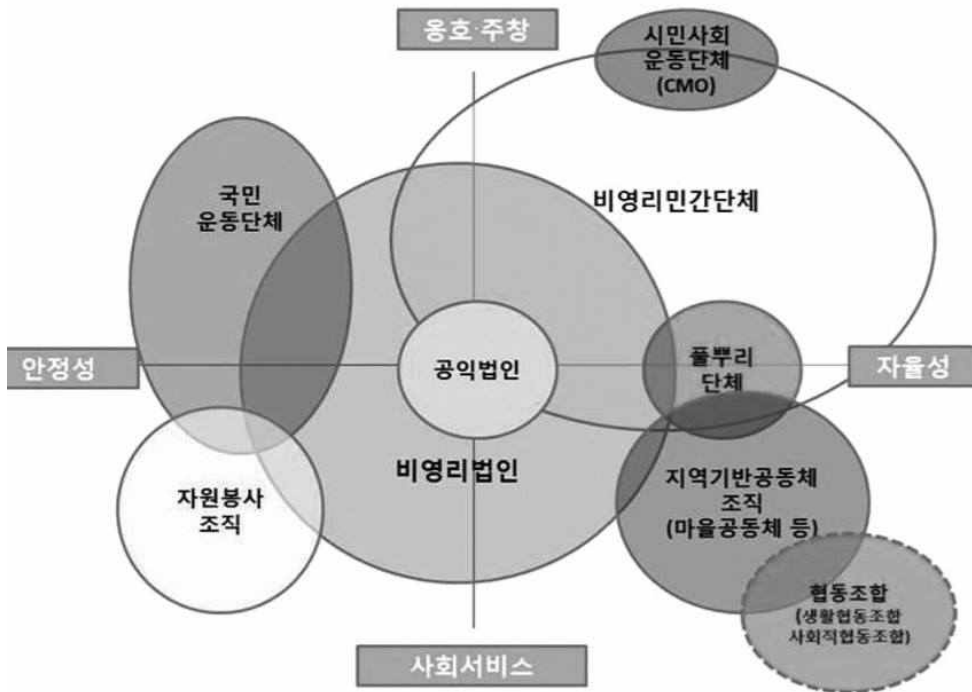
이 되는 운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콜린 크라우치 2005) 반독재 민주주의, 적폐청산 민주주의를 넘어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로 시민사회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싸움을 걸어 나가지 않는 한 시민사회는 자신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운동, 그것은 시민사회의 생존권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 Ⅲ. 시민사회 조직화의 방향

#### 1. 시민사회 조직의 현재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가적 공조직도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 기업도 아니면서 시민들이 모여서 모임이나 단체를 만든 경우는 사실 꽤 다양하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 단체들과 같은 전통적인 시민운동단체(CMO)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림 12〉 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도



사실 국가도 그렇고, 시장경제도 사실 예외가 아니지만 특히 시민사회는 그 사회가 걸어온 '역사성'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는 “정부와 대립하는 한편, 깊이 결탁해온” 극단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시민운동 단체들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저항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서 정치적 정당성을 얻어왔다면, 이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평적 차원에서 합의해야 하는 다음 단계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꽤 설득력 있다.(공석기.유지연. 2017)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보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다양성이 더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고, 명사들이 중심이 된 전국적인 대변단체들 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공동체와 커뮤니티 구성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느리지만 시민사회의 내부 구성이 진화하는 동안, 이를 뒷받침해줘야 할 정부와 제도는 어찌면 가장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후진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있지 않는가 싶다.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 박스를 포함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온 사례와 달리,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정말 형편없이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 2. 전문가 의존적 시민사회 조직화

지금까지 조직화 관성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은 '활동하는 회원'보다 '후원회하는 회원'들에게 의지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 조직화 경향이 흘러간 대목이다. 이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20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기도 하다. 후원회원 중심의 시민단체는 대개의 경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시민단체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사회문제들이 계속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행정이나 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비판만 하는 것을 넘어서, 꼼꼼히 대안을 제시하면서 압박하고, 필요하면 협력을 하는 과정에 들어서자면 일정하게 전문가의 참여와 이니셔티브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일반 시민회원들을 대신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발언을 해주고, 시민들은 그저 회비나 내고 박수나 쳐주는 구조로 '나쁜 역할분담'이 되는 경우다. 만약 이런 경향들이 오래 지속된다면 시민사회의 적지 않은 활동적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준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이른바 활동가들도 반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역할로 고정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경향아래에서 시민들이란 '회비 내주는 회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전문가주의는 시민단체를 넘어서 정치영역에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랭크는 최근 저서에서 클린턴에서 오바마까지 미국 민주당이 '일반 시민 민주당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의존함으로써 대중성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우익 포퓰리즘 등장에 기여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데,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

다. “(미국) 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구성원들에게 전문직 종사들이 상위 서열을 차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 결과 “그 모든 똑똑한 사람과 명예로운 전문직 종사자와 아이비리그 출신 박사들에게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충격적인 특징 중 하나는 소심함이었다. 답답할 정도로 부족한 독창성이었다.“(토머스 프랭크 2016)

이런 지적은 유럽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상탈 무폐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 정치공간에서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경합을 “철저히 부정하고, 중립적 영역에 있는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으로 정치를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 기획들 사이에서 실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의 역할은 그저 전문가들이 고안한 '합리적' 정책들을 승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무폐 2018) 이들 사례는 정치와 정당에 관한 이야기지만 시민사회도 매우 유사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문가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존재 이유이자 장점,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활동하는 에너지는 전문성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목소리와 지혜,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 많고 다양하며, 절박한 목소리들을 가능한 넓게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아닐까 싶고, 이를 조직화로 연결시켜야 행정과 - 기업 - 시민사회의 세력관계의 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성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관련하여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유럽의 귀족들과 같은 소수 전문가들의 정치에 비해 깔끔하거나 세련됨, 확실하고 신속함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갖는 위대한 장점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자유로운 민주정치는 능란한 기술을 가진 전제정치처럼 그 모든 계획을 말쑥하게 성취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민주정치는 국민에게 가장 능란한 정부를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가장 유능한 정부라도 흔히 이루어 놓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낸다.“ 시민사회 역시 말쑥하고 세련된 활동과 목표달성 보다는, 행정이나 기업들이 절대 해낼 수 없는 '흔히 이루어 놓을 수 없는' 절실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후원회원’ 중심의 시민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사회적 자본으로 유명한 로버트 퍼트넘은 기존에 주류를 차지하던 1차 단체(가족, 친구)와 2차 단체(노동조합, 지역단체 등)들이 위축되어가는 와중에 1990년대부터 바로 ‘3차 단체(tertiary association)’라는 것이 화려하게 부상했던 점을 주목했다. 3차 단체라고 지목되는 단체들은 특히 그 조직원(회원)에서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이 단체의 회원들 중 압도적 다수에게는 회원으로서의 유일한 행동이 회비 납부용 수표에 사인하기, 본부에서 보내주는 소식지나 가끔 읽는 정도일 뿐이다. 이런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단체들은 아예 모임도 마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조직의 융성은 ‘조직화의 성취’라기 보다는 후원

회원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승리'라는 편이 차라리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들 3차 단체에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은 자신을 회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 자신이 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내는 돈은 그저 기부금 일 뿐이에요".(로버트 퍼트넘 2000)

이와 같은 유형의 단체들을 '저항 비즈니스(The Protest Business)'로 꼬집은 그랜트 조던의 비평도 꽤 공감이 된다. 그는 3차 단체들을 일컬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저렴한 참여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허용한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잠재적 회원이 진지한 분석을 막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게, 이 단체들은 '진짜' 참여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 입장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한다. '비교적 경제적 넉넉한' 시민들이 '저렴한 참여'를 해온 하나의 방식이라는 비판이 다소 과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요즘처럼 중산층 약화의 추세에서는 그 조차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까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3차 단체'도 물론 여전히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후원하는 회원'의 조직이 아니라 '활동하는 회원'들의 조직화 - 2차 단체의 수준 이상으로 활동하면서도, 기존의 2차 단체만큼 너무 수직적 위계화 되지 않고, 무겁지는 않는 그런 조직화를 새롭게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사실 이런 조직화는 이미 초보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 공동체 운동이나 사회적경제 조직화 추세가 그 하나라고 본다. 특히 지역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여 '이웃'이자 '거주자'이자 '수요자'이며 '노동자'이자 '잠재적) 공급자'로서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조직화가 특별히 주력해야 할 시민사회 조직화 방향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향의 활성화를 이루려면 먼저 조직화해야 할 (잠재적) 회원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회원의 회비'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회원의 시간'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 이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 3. 자원동원 전략 관점에서의 시민사회 조직화

민주주의나 민중생존, 환경, 시민권 등 '공공선'이나 '사회적 가치'에 토대를 두고 발전해온 한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구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나 '다원적 민주주의' 관점들의 일부를 활용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들 관점은 부분적으로는 시민사회 활동을 위해 실용적으로 유용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점차 우리사회의 복잡성이 커져감에 따라 단순히 총체적 차원의 공동선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직하고, 그들의 실질적 활동을 고무하기 위해 재정적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진 측면도 있다. 어쨌든 공동의 당위뿐 아니

라 부분의 이해관계를 조직할 필요도 발생했고, 필요나 분노만의 조직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자원 동원하는 전략까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하여 이미 오래전에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Mancur Olson)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가정에서 “공동이익이나 목표에 대해 한 집단의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더라도 조직을 결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했던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집단의 공동의 이익(예를 들어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확대)이기 때문에 조직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비배제성), 자신의 조직가입이나 활동은 소소해 보이거나 활동을 안 해도 유무형의 제제가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른바 무임승차이론이다. 특히 회원 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개인의 기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소소할 뿐 아니라,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간과 돈을 희생할 유인이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올슨 1964)

그래서 그는 시민사회 조직화를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면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제도처럼 의무, 강제가입제도를 도입하든지, 조직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 즉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에게만 차례지는 다양한 서비스나 혜택, 특별한 정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특별한 사업적 혜택을 줌으로써 조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거대조직을 아주 '작은 조직'들의 연계로 쪼개하는 것이다. 회원들 간의 대면(face-to-face)이 이뤄질 정도의 작은 조직은 자신의 부담해야 할 기여가 절대로 소소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로 얽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지점들은 시민사회에서 의식을 했던 안했던 이미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이디어이며 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직전략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나가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발전이 시민들의 개인적 사회적 불편이나 분노에 의해서만 조직되기는 쉽지 않고 동원 가능한 “자원, 조직, 기회의 변화 등에 의해 결정”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시민사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임희섭 2000) 왜냐하면 처음에는 노동이슈나 환경, 젠더 이슈 어느 것이든 시민들의 분노나 사회적 긴장 속에서 시민단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일련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위기적 긴장'국면은 해소된다. 어느 시점에는 긴장과 위기적 국면을 지나 '다소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의 국면이 왔을 때에도 조직을 여전히 확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원 동원전략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처럼 시민들 자체 내에서 충원할 수 있는 재정적, 공간적 자원들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면 올수록 시민사회 활동은 자원동원 전략으로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단결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조직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수도 없이 많다. 사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 조직의 역사는 바로 이런 현실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까지 고려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 동원전략을 기획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생긴 일이고 앞으로 더욱 자세히 감안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역사에서조차 이런 대목들에 쉽게 치중하다 보면, 당초에 시민사회라는 공간이 왜 만들어졌고, 그 공간에 시민들이 머무르면서 서로 관계 맺고 그 안에서 활동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여전히 시민사회 공간은 공적 가치로 연결되어야 하고 사람이 최고의 자원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 4. 온라인 조직화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이제는 시니어 세대까지 익숙한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일상화는 시민사회도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강한 기대를 낳기에 충분했다. 이미 2008년 촛불시위에서부터 그 위력을 선보였던 온라인 카페들은 지금도 젠더시위 등에서 손색없이 힘을 발휘하면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관심사를 다양한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 보니 정보와 관심의 유통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든지, 관계의 강도가 매우 낮거나 편향되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SNS에서는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는 현상이 정보와 관계의 심한 편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다. 미국의 시민단체 무브온(Move on)의 이사장인 엘리 프레이저(Eli Pariser)가 TED 강연에서 했던 다음의 인용이 대표적이다.

“저는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늘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경청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그들이 연관된 것을 확인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수주의자들이 제 페이스북 피드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스북이 제가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지 살펴보고 있었고, 그것은 실제로 제가 보수적 성향의 친구들보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링크를 더 많이 클릭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페이스북은 그것을 편집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죠.”

사실 시민들은 20억 명이 쏟아내는 페이스북 정보와 관계의 바다 속에서 극히 소수의 친한 친구나 성향이 비슷한 극히 소수의 글만을, 마치 고립된 섬에 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볼 뿐 다양한 사람들이나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다. 20억 명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대목에서는 그냥 20억 명 각자의 가상 네트워크를 페이스북 관리자들이 '만들어' 준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SNS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관계에 대한 포괄적 배려'를 하기 보다는, 매우 근시안적인 개인적 선호 만족(물론 그 안에 관계도 있겠지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찌면 너무 당연하다. 그래야 돈이 되니까. 페이스북 공간은 더도 덜도 아니게 '완벽히 사적 기업의 시장(market) 거래 공간'이다. 따라서 거대 상업기업들이 '소비자'를 위해 펼쳐놓은 SNS는 원칙적으로 시민사회의 커뮤니티 조직화가 머물러야 할 공간, 또는 플랫폼이 될 수 없다. 이는 마치 '시장경제 안에 시민사회의 거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사고하는 것이 착각인 것과 같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에서 잘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적 의견= 여론(public opinion)을 훨씬 더 잘 모아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평범한 시민이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고, 단지 개인용 컴퓨터 비용이나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약간의 요금 정도만 지불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서로에 대해서나 권력에 대해서조차 상시적으로 말하고 교류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로 '비트로 된 공론장', '전자적 아고라'의 등장, '전자적 커피하우스'라는 비유를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해도 되는 시대가 온 것일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의 참여와 토론이 점점 더 (온라인)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의 대규모 군중이란 직접적으로는 단지 일부의 동료와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상의 공동체'가 된다. 미디어는 시민을 대신해서 상징을 배치하고 확산시키며, 공적 토론과 문화적 친교의 무대를 선별적이지만 만들어 줌으로써 그러한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루크 구드 2000) 즉, "대규모 의사소통 미디어가 시민들의 공유된 해석 틀을 확립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틀림없고, 따라서 '디사이드 마드리드' 등과 같은 거대 온라인 공론장을 다양한 차원에서 설계되고 응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물론 이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에 따른 엄격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공적인 성격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종 온라인 상업사이트의 평점(영화나 서적, 심지어 우버나 에어비엔비의 평점 매기기)들을 일종의 여론으로 볼 것인지, 뉴스나 포털의 댓글들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작은 규모의 '미시 공론장'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모임, 단체 카톡방이나 텔레방 등으로 상징되는 작은 모임이나 미시 공론장들은 어떨까? 공론장이나 조직화란, 기본적으로 서로 토론하여 의견과 지향을 공유하고 통일된 의지를 조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전의 우편이나 전화가 되었든,



지금의 카톡이나 스마트폰이 되었던 통신, 인쇄/정보기술의 혁신은 혁신되는 것만큼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미시공론장의 형성은 또한 '면대 면 접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관계의 힘'을 축적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언어'나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의사소통행위'는 관계와 교류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매우 제한된 일부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이 '관계의 축적', '신뢰의 축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언어'나 '문자'를 넘어 '정서'와 '분위기로'로 전달되는 더 많은 것들이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시 공론장이 열리는 주민총회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고, 커뮤니티를 실제로 만나서 조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관계를 조직하는 데는 비록 기술이 발품을 조금 줄여주겠지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발상의 연장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최근 10년 가깝게 플랫폼 조직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러면 과연 플랫폼 유형의 시민조직화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도 이 대목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을 플랫폼 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공담을 말하는 '시민사회조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약적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조직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플랫폼 형 시민사회조직에서 성공사례가 나오지 못했던 걸까? 수수께끼 중 하나다.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서, 플랫폼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막연한 감으로 그저 사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가상적)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데이비드 에번스에 따르면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로는 '그 위에 뭔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혼란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데이비드 에번스 2017) 예를 들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부를 때는, 첫 번째 의미 '그 위에 뭔가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다. 문제는 시민사회가 플랫폼 조직이라고 명명하면서 대체로 실제로 실행한 것이 이처럼 뭔가 사람들이 와서 모이고, 놀고, 이야기하고, 작당하는 공간으로서 플랫폼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더 좋은 공간이 있거나, 유행이 바뀌거나 하면 다시 사람들은 다른 공간을 찾아 떠나버리게 된다. 쉽게 올 때처럼 쉽게 떠날 수 있게 되고, 특히 그 공간에서 축적되는 것이 없게 된다. 조직이란 힘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축적될 때 의미가 있다.

플랫폼의 두 번째 의미, 즉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바로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다. 흔히 경제학자들이 '양면시장 이론' 또는 '다면 플랫폼 이론'으로 체계화한 그런 의미다. 교통수요자와 자동차 소유자를 연결한 플랫폼인 우버, 숙박 수요자와 빈방 소유자를 연결한 에어비엔비 식으로 말이다. 이

대목에서 플랫폼 기업(주식회사)들은 대 성공을 거두었지만, 플랫폼 시민사회(조직)은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플랫폼을 만들 때, 한 편에서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뭘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 다른 편에서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뭘 줄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 또 다른 편에서 그 플랫폼에 와서 뭔가 제3, 제 4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서로가 의미 있는 수준에서 모일 수 있도록 양면/다면사이의 임계점을 넘기 위한 전략을 제대로 세우려는 기획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시민사회에서 플랫폼은 '그 위에서 사람들이 머무를 무엇'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매개하는 무엇'으로 정확히 정의하고, 상호작용에 참여할 최소 두 집단, 또는 세, 네 집단을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을 통해 작동시켜야 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플랫폼에서 상호작용이 넓어지고, 구조화면서 '관계'의 안정화로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조직'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호작용을 말하는 걸까?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히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핵심 주체라는 비교적 명확한 답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시민사회는? 논리적으로는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가진 시민들'과, 어떤 식으로든 시장 기제가 아닌 방식으로 '필요를 충족해줄 수 있는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최소한 양면 시장을 이루고, 이를 중개하고 조직화하는 노하우를 가진 집단이 플랫폼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다면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정당, 지식인, 언론 등이 함께 한 면씩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5. 생활 지역기반 커뮤니티 조직화

어떤 거점을 축으로 시민사회를 조직해야 하는가는 늘 그렇지만 오늘날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최근 사회경제 전반의 분산화, 지역화 경향과 함께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 부상은 생활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관계와 커뮤니티를 성장시킴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거대기업들의 슬림화, 하청, 외주화, 체인화 경향과 그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개인화는, 시민들에게 비자발적인 1인 가구, 프리랜서 노동이나 임시직 일자리 등 노동과 일의 개인화로 연결되면서 전반적인 사회관계의 단절이나 관계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족을 대신할 친밀한 관계, 직장 동료들 대신할 사회적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초 연결사회에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역설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지금 시대의 최고의 복지는 '공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이 대목에서 사람관계의 구심력이 직장이나 직업보다는 주거생활반경이 다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책들도 커뮤니티

니티 기반 케어,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밀착형 일자리, 커뮤니티 기반의 에너지 대안, 커뮤니티 기반의 생활자치(주민자치회),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 등처럼 주거생활거점으로 밀착되어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현대의 복지가 물질적인 시설이나 상품 보다는 '관계'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현대의 일자리가 관계 밀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생겨나는 경향이 있는 한, 그리고 현대의 정치가 점점 더 생활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치를 고무해주는 한, 이런 경향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공적 자원이 주거생활거점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자원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시민사회운동에서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역사는 다른 수준에서 반복될 수 있다. 주거생활거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형을 보여준 19세기 미국의 타운민주주의는 이 대목에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남겼던 알렉시스 토크빌은 전형적인 타운에서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자치와 결사, 총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냥 옛날 얘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대단히 매력적인 지점이 있다. “마을의 1/4 정도의 주민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한쪽에서는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좀 떨어져서는 한 구역의 대표자들이 어떤 지역개선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마을로 발길을 서두르고 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마을의 농부들이 쟁기를 버려두고 도로나 공립학교 계획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단지 정부가 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려는 목적만으로도 집회들이 소집된다. 그런 반면에, 다른 집회들에서는 시민들이 행정당국자들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기도 한다. 술 취하는 것을 만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면서 금주의 본보기를 보이는데 엄숙한 태도를 보이는 결사들이 만들어진다.“ “타운 집회가 자유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는 초등학교들이 학문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와 같다. 타운집회에서는 자유가 주민들의 손이 닿는 범위에 들어 있게 되며, 그런 집회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누리는가를 가르쳐준다.“

물론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하던 1830년대 당시 동북부 미국의 타운은 주민들이 대체로 비슷한 정도의 자산과 경제력,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고, 마을이 곧 일터인 그런 여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주민들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으니 평등하게 자유롭게 모여 토론할 수 있었고, 주거지이자 일터인 자신들이 공간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공통적으로 해야 할 얘기와 주제가 차고 넘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토크빌이 칭찬했고 18세기부터 활성화 되었던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 버전의 주민총회인 '타운 미팅'이, 이후 선거운동의 하나의 방식인 '타운 홀 미팅'으로, 더 나아가 속의 민주주의 장으로서 '21세기 타운미팅(수천 명이 모여서 토론하는 속의 공론장의 하나)' 등으로 지금까지 다양하게 진화하는 저수지 같은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적 시차와 환경적 차이가 있다고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서울시가 424개 행정 동에서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일부에서 동장 개방형 공모제나 추천제를 실시하는 등 제도나 환경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점차로 생활지역의 착근성과 구심력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점점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도시는 단지 베드타운이라고 간단히 도외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거생활지역 반경의 진정한 커뮤니티 조직화를 시민사회 조직화의 주요 방향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사회라는 '큰 추상적 전체집합 바구니' 안을 채워줄 유력한 내용물이 거대한 몇 개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라고 하는 수 없이 다양한 '모임들의 부분집합'들이 유동적으로 얽히면서 변화해나가는 것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조직들이 당장은 거대 사회적 쟁점들을 변화시킬 동력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의존할 공간이 되어줄 수 있고, 결국은 이를 토대로 거대 시민사회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 6. 공론장의 조직

시민들은 조직되기 이전에 움직인다. 과거에는 주로 저항을 위해 거리로 나오거나 했지만, 최근에는 더 자주 토론을 위해 공론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진 듯하다. 움직이려는 시민들의 욕구를 잘 조직을 해야 시민조직화가 가능해진다고 보았을 때, 시민들의 '전투를 조직화' 하는 것 이상으로 '소통과 토론을 조직화' 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어쩌면 최근의 시민들은 과거와 달리 "개인적 자유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강한 참여를 주장"하지 않고도, 서로의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주위의 사람들과 '이미 주어진 구속적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 걸고, 소통하고, 서로의 의지나 목표, 행위방식에 대해 조정하고, 합의함으로써 '우리'의 공동행동을 이끄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 하버마스가 '의사소통행위' 모델로 공론장 이론을 발전시킨 것은 그런 취지가 있다고 판단된다.<sup>2)</sup>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사적 삶과 공적 삶을 적극적으로 매개해주는 방식으로, 개인주의적(목적론적 행위)와, 사회규범 순응적 행위를 벗어나는 적극적인 관계망 조직화 행동방식으로서 발전시켜볼 여지가 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이렇게 시민사회와 연결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활기찬 시민사회와 역동적인 정치적 공론장을 먹고 산다. 주변화 된 계층을 정치적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며,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목소리를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이 나와야만 한다." (하버마스

2) 그는 사람의 행위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1) 목적론적 행위 - 자기이익을 위한 경제행위 등, (2) 규범적 행위 -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집단이 요구하는 규범을 따르는 행위, (3) 극적행위 - 감정 소망 등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 그리고 (4) 행사소통행위 - 서로 관계를 맺는 둘 이상의 주체사이에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일치된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합의행위 등을 포괄한 것 같다.

1981)

에드워즈 역시 지금 공론장이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생히 묘사한다. “공론장의 초기 사례들로는 18세기 런던과 에든버러의 커피하우스, 혁신적인 뉴잉글랜드 지방의 타운미팅, 모든 역사적 도시들의 공중 광장들에 생기를 불어넣는 토론회들이 포함된다. 근래의 예는 매우 다채롭다. 문학 서클과 독서 클럽등의 '미시적' 공론장들, 시민 배심원단과 공공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토론의 날', 독립적인 신문들, 양식화된 토론 프로그램들, 국민투표와 전국 수준의 여론조사에서부터 세계사회포럼 혹은 상이한 이견의 사람들을 위한 사이버 공간상의 지적 대화의 장을 자처하는 오픈데모크라시와 같이 공중에 열려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드워즈 2000)

이런 대목들을 보면 이제 조직 안에서든, 조직 주변에서든 '토론'과 이른바 '숙의(deliberation)'가 더 많이 강조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다소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기존에는 '투쟁하는 조직'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토론하는 조직'의 성격을 보다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투쟁하는 민주주의 경험 이 곧 토론하는 민주주의 경험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어쩌면 완전히 별개 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높은 수준의 토론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훈련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어떤 점에서 '토론'이나 '합의'는 보수나 진보 모두에게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시기를 통과했는지도 모른다.

시민사회에서 의사소통과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시민 개인들의 최초의 선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개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선호'는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개인의 선호가 가장 잘 반영되도록 가격신호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듯, 정치란 그들에게 시민들 각자의 선호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다수를 취해서 의사결정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호도가 정치적 과정과는 무관하게 이미 고정되어 있다면, 시민들이 자신의 견해의 장점이나 정당성을 다른 시민들에게 설득할 기회조차 없게 된다.”(장동진, 2012) 하지만 숙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호가 고정 불변하지 않고, 토론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공공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상호 이해하는 과정에서, 즉 “일상적 대화를 통하여 상호적 이해, 즉 자유롭고 비폭력적 행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민주주의가, 개인선호를 단순히 합산하는 '투표중심(vote-centric)'으로부터, 서로의 토론을 통해 각자의 선호를 바꿀 수도 있고 상호 이해를 도모해가는 '토론중심(talk-centric)'으로 진화해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신념체계나 구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에 동화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는 일상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조직운영에서, 근본신념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 말고도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의견 차이나 갈등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경험을 너무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모든 차이나 갈등 등을 물질적 기반의 차이 때문으로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명확히 '이기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으로만 대화와 토론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서로의 다른 개인의견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을 잘하는 시민사회 활동가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

## 7. 정체성의 조직

굳이 구분한다면 당위와 동원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를 빚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전략 지향적(strategy-oriented)' 조직화와 함께, 개인들의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공동의 유대를 느끼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정체성 지향적(identity-oriented)' 조직화로 시민사회 조직화 방향을 나눌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정체성을 조직하는 것은 그 안에 매우 혼란스런 함의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신중함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크 릴라(Mark Lilla)는 “난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모두가 미국인으로서 공유하는 무언가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 무언가는 우리의 정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우리 정체성의 존재와 중요성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 무언가는 '우리 민중(We the People)'으로서의 공통성 “이라고 강조한다.(마크 릴라 2017) 또한 미국의 보수가 최근 전형적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배타주의적, 국수주의적 포퓰리즘으로 흐른 경향을 주목한 후쿠야마는 '우월한 인정(megalothymia)'의 정치를 추구한 결과라고 보고, '동등한 인정(isothymia)' 를 압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후쿠야마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를 포함하여 소수자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더 그럴 전망이다.

이 대목에서 사실 1990년대 말에 개혁적인 페미니스트이자 정치철학자인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악셀 호네트(Axel Honneth)가 논쟁했던 분배와 인정 문제를 재검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원의 재분배 정책분야와 다양한 정체성 인정이라는 분야의 교집합을 구성하는 문제는 오랜 논쟁과 이론적 고민이 엮여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프레이저 관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분배 패러다임은 각 사회의 경제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의에 집중” 하는 것으로 물질적 착취, 주변화, 박탈로부터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불평등이 세계의 이슈로 부상한 오늘날 시민사회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분배 정치는 계급 정치와 동일시되는 반면에, 인정정치는 ‘정체성의 정치’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시 정체성의 정치는 젠더, 성, 민족, 종족, 인종 등을 둘러싼 투쟁들과 동일시된다.”

그런데 프레이저에 따르면 정체성 문제나 인정 요구들이 일반적으로는 분배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부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젠더에 특유한 형태의 신분종속으로 고통 받는다. 여기에는 성 폭력과 가정폭력, 대중매체에서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욕적인 묘사, 일상생활에서의 괴롭힘과 비방, 완전한 시민권 부여 및 시민권에 대한 동등한 보호의 거부 등이 포함된다.” “분배만으로 이러한 불의를 극복할 수 없으며, 인정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독립적인 대책들이 요구된다.” (프레이저 2000)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분배나 인정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가 교착되면서 복잡한 국면을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 공히 함께 대처하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비전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집권을, 후쿠야마식으로 표현하면 분배문제 악화를 방지한 결과가 정체성 이슈로 왜곡되어 표현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미국사회 분배문제인 불평등 문제를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정체성 정치로 흐른 결과 백인 남성 기존 주류집단들의 보수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우익 포퓰리즘 발흥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20대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해석하는 다양한 논쟁도 유사한 국면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요점은 분배나 인정이냐, 또는 정체성에 시민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와 인정을 어떻게 함께 고려해서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만,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지에 있다고 본다. 아직 한국사회는 지난해 미투운동처럼 분배투쟁과 인정투쟁이 각자 도약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직할지는 시민사회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될 것 같다.

#### IV. 결론: 개인은 조직되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도 넘었고, 2020년대를 눈앞에 두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힘은 너무 크다. 국가와 행정은 상당히 관성대로 움직이고, 정당들은 더욱 “폐쇄적인 엘리트 정치서클”처럼 되는 느낌이다. 시민사회는 곳곳의 공간에서 새로운 싹을 틔워가는 것 같지만,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작아졌다. 이를 시민들이 각자도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개인은 조직되어야 하고 시민은 조직을 통해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은 조직과 사회를 떠나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거나 과거 조직의 타율성에 대한 트라우마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은 조직과 사회를 떠나서는 자율적인 선택과 사고가 아니라 배제와 괴롭힘을 면하기 어렵다. 모든 조직에서 추방된 ‘난민’이 그것을 극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난민에게 자율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각자가 풀기 어려운 21세기 시민사회의 특별한 난제가 있다. 국가의 위축, 시장의 과도한 팽창이 시민사회를 지탱시킬 자원을 한없이 위축시켰다는 점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활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문제다. 지금은 과거처럼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가장중심을 경제활동을 전제로 이들이나 가정주부 등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료 봉사활동’을 하는 노동력을 토대로 시민사회를 움직여갈 수가 없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시장이 외면하고 국가가 위임한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점점 더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상당한 시간을 매우 기능적인 작업을 하는데 투입해야 하는 시민사회 활동이 늘어나게 되었다.

관련하여 사실 이전부터 시민사회의 공공서비스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논의는 있었다. 이를테면 바버는 국가가 민주주의를 위한 거대한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면 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나이가 들어 퇴직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동에 종사하면서 잃어버렸던 가치를 되찾아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침내 시민사회는 그 자체의 노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민주주의는 가장 거대한 고용주가 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의 활동이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인간다운 업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벤자민 바버 2000)

한편,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데, 불평등 연구의 대가 앤서니 앳킨슨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면 소득을 주는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노동과 마찬가지로 취미활동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시민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가 상업적 노동처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적절한 분배를 통해 욕구를 조정할 수 있고, 상상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치로 인정받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앳킨슨 2015)

개인이 조직에 참여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시간적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지금의 ‘유별한 상황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시민사회가 ‘공공서비스’를 공식적으로 ‘공동생산’하는 직간접 활동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공적 보상, 사회적 보상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가치’ 언급을 많이 하면서도 막상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주체인 시민들에게 ‘사회적 가치 활동 보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이자 사회적 가치 존중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활동 보상 방안과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참여소득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타임뱅크’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세금의 일정 퍼센트를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포함하든 길을 열어놓고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대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 안타까워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대안이 없는 것은 신자유주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무모한 대안을 창조하는 것 같다. 반면 시민들에게는 이제 다양한 대안의 조합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부족한 것은 대안이 아니라 ‘대안을 실현할 주체다.’ 시민사회를 풍성하기 위한 더 낙관적이고 참신한 전략과 기획, 조직 방법론을 모색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시민사회야말로 “과거가 우리의 미래일 필요는 없다.”

Memo

## 토론1

### 조직 운동의 사회적 가치, 시민사회단체의 조직화된 운동의 성과와 한계

김경민 |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들어가는 말

촛불 시민혁명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고 있다. 국민과 시민 그리고 민중 (PEOPLE) 은 어떻게 구분되며 어떻게 중첩 되는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 부터 다중 공중 군중 등 사회내 집합행동에 대한 해석의 노력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시민사회 운동의 구체적인 양태도 온라인 기반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부터 1인 활동가, 당사자 운동 등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의 정형화(관료화) 권력화 독점화 등의 비판적 문제제기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스스로를 혁신해야 하며 촛불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존재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 될 수 있을까?

#### 1. 운동 좌표의 상실

한국 시민사회는 저항적 민족운동으로부터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인민, 시민)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참여와 투쟁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왔다. 구소련의 해체와 90년대 시민운동은 민민 운동의 단절과 계승을 통해 등장했으며 또한 미국과 유럽의 신사회운동의 경험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운동의 양적 질적 팽창과 성장을 이루어왔다. 분단 극복 및 평화체제의 수립, 불평등의 해소, 내전 수준의 심리적 절멸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 정치권의 비효율 등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운동의 다양한 표출과 힘의 집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연대의 형식과 이론에 대한 모색이 요청된다.

## 2. 시민참여의 활성화

시민은 개인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적 개념이다. 그래서 시민운동은 개인의 자발성,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사회운동이다. 현재 시민운동은 자신의 표현형식을 개별화의 극단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신을 확대하고 있다. 참여의 영역과 공간이 다양화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일까? 시민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자연스럽게 시민단체의 비대화과 이를 통한 관료화, 기득권세력화 등의 비판적 검토를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 시민단체의 존재 정당성에 대한 질문까지 직면하게 된다.

## 3. Association (자발적 결사) 원칙의 재확인과 조직 혁신

어소시에이션은 근대의 탄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상이다. 근대한국도 국권위기의 1900년대 어소시에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권수호투쟁의 동력과 기본단위의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의 탄생과 연대를 자각적 시민사회라 한다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교훈은 아직도 살아있는 운동의 강령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 그리고 연대의 연대 !!! 시민운동 활동가는 어소시에이션의 분업화 전문화의 결과이다. 즉 단체 회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운동의 관료화와 고비용화에는 회원, 자발적 참여자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전문 활동가 중심의 운동으로 고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회원 시민의 참여가 조직, 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흐름으로의 시민단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 4. 전문가와 전문성 그리고 대안의 생산

1990년대 경실련의 등장과 함께 시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곧 바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 연합 등이 시민사회 영역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시민운동으로의 운동방향의 이전에는 반대에서 대안제시라는 슬로건이 깊게 작용했고 그 효과로 시민운동의 무대에 참여한 첫 번째 세력은 전문가 그룹이었다. 정치엘리트 관료엘리트에 대항하여 사회엘리트 그룹이 시민단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적담론공간의 주요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적 시각으로 활발하게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그룹의 시민참여는 시민주의적 정책과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극히 전문적인 대안생산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보통시민(평범한 시민)의 참여를 제약하는 한계도 노정하였다. 시민사회의 비판적 문제제기와 공적 토론공간을 통한 시민의 참여 그리고 대

안의 생산이라는 과정 중 공적토론이라는 장이 생략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정부 (GO) 와 NGO 간의 논의의 독점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사자 1인 활동가로의 이동에는 이런 전문성 요구라는 강박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문제, 환경문제, 소비자 문제 등 각 영역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리소서 퍼슨의 축적이라는 시민단체의 순 기능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5. 촛불 시민혁명과 시민사회단체

촛불 시민혁명은 다중의 참여와 시민혁명을 표상하는 상징이 되었다. 물론 시민혁명이라는 개념 안에는 개별성, 개성화, 다양성을 표현한 집합적 대중운동이었다는 점이 담겨있다. “절대 다수의 조직되지 않은 시민”이라는 수사가 촛불 혁명을 설명하는 중요한 수사로 제기된다. 광우병 촛불 집회로부터 촛불 시민혁명까지 참여 주체의 구성은 개인(가족) 다양한 어소시에이션 (독서모임, 애완견 모임으로부터 시민단체) 노조 정당의 참여까지 소위 국민전선의 틀을 포용하고 있다 (이때 국민전선은 국민의 정부, 국민운동본부 등에서 사용되는 국민) 물론 시민혁명 수준의 운동에서 국민전선이라는 전선의 범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촛불 시민혁명은 그래서 개인과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의 참여가 그 축을 이루지만 또한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일정하게 구실을 구성하였다는 점과 행정력이 시민친화적으로 작동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마치면서

촛불시민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유엔은 기후변화 불평등 평화(난민, 전쟁, 비핵화 등)를 지구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문제로 범주화하고 있다. 불평등 기후변화 평화의 문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명적 도전이기도 하다. 촛불시민으로 합류한 사회혁신 동력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성장 진화하면서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힘으로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시민단체가 한국 시민사회의 기층을 흐르는 혁신의 힘을 저장하고 결집하고 방향을 잡는 센서의 기능을 갖도록 스스로도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며 평화와 통일 불평등의 극복을 위한 촛불의 꿈을 이어가고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Memo

## 토론2

###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대변운동에 대응하는 당사자 운동이 갖는 의미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많다.

나도 우리가 과연 어떤 조직인지, 어떤 면에서 다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냥 많이 다르다는 것만 안다. 나 자신이 시민사회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데, 혹시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여기 계시다면 정치하는엄마들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다보니 나는 오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편협하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고 나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꼭 알려주시기 바란다. 나는 언제든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4년 동안 국회의원이었던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 그들을 비판할 시간을 조금 줄이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시간을 더 써야한다. 민주당이 자유당을 기준으로 좀 더 나은 정당이 되는데 그치기에 정치발전이 없듯 우리도 한국의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기득권을 기준으로 좀 더 나은 집단인 것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자학적으로 반성해야한다.

2019년의 한국사회가 여전히 이 꼬락서니인 데는 이 일을 오래한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 고의든 과실이든 말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당사자 조직이 맞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는 당사자와 활동가의 구분이 거의 무의미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소수자로서의 당사자성이 충분한 활동가’ 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우리는 활동가 양성소, 활동가 아카데미, 활동가 학교가 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활동가를 낳는다. 즉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난다.

SF소설 같은 소리지만, 불과 2년 전 이 모임을 제안한 나로써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세상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지만, 놀라운 점은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는 우리라는 건 활동가들을 말하는데, 정치하는엄마들의 상근활동가는 나를 포함해 두 명이지만 우리 안에는 많은 (인원을 특정할 수가 없음) 활동가들이 있다. 이걸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 건너뛰겠지만 정치하는엄마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활동가 조직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말 많이 다르다. 2년 전 내가 바라던 것은 내가 사는 세상에는 없던 것인데 지금은 바라던 바를 넘어선 것 같다. 나는 시민사회 안의 위계, 시민사회와 시민사이의 위계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엘리트주의가 한국사회를 좀 먹고 있다. 민주사회와 인권사회의 걸림돌이다. 시민사회가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위계가 발생한다. 시민은 그걸 느낀다. 계몽이 아니라 설득이 되어야 하고 대화를 요청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생각이 없지 않다. 행동하지 못할 뿐이다. 먹고 사느라 바쁘기도 하거니와 행동할 기회와 참여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광장에 나온 수백만의 촛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다들 궁금하지 않은가? 광장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수를 상상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엔가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회원가입(후원)만을 바라거나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가르치려) 하지는 않았는지 각자 마음속으로 돌아볼 일이다.

그들이 맞고 우리가 틀린 것들도 수두룩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더 잘 안다. 내 말이 맞다.’는 마음자세가 끈대이즘이고 엘리트주의다. 그런 자세로는 대화도 토론도 될 리가 없다. 그리고 토론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가 없다. 시민사회가 시민을 청중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뭘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말하러 오는 곳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고, 그래서 무급 활동가가 많아질 수 있었다. 나에게도 왜 다른 엄마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겠는가?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들, 아이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엄마들, 아이에게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엄마들, 아이에게 꿈을 물어보지 않는 엄마들, 그러나 엄마들은 그렇지 않은 않다. 광장에 모였다가 사라진 수백만의 사람들을 연상하면 된다. 엄마라는 소수자 운동을 같이 할 사람들이 수백만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수백이면 족하다. 편견 없이 바라보면 활동가가 될 엄마들은 충분히 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문제만 남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할 때 대표들만 발언한다거나 각계 인사를 초청해서 발언을 듣는다거나 하지 않는다.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를 보면 ‘발언1 김신애 활동가(5세 7세 양육자), 발언2 강미정 활동가(3세 7세 활동가), 발언3 김정덕 활동가(6세 양육자)’ 이런 식이다. 이 김정덕 활동가는 공동대표인데 그걸 우리가 먼저 표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표엄마 같은 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엄마들의 발언은 다 다르고 힘이 있다. 초창기에는 기자회견장에 아이들이 함께 서니까 언론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이상한 이름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자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아이들 사진 찍으러 오진 않는다. 이상한 이름도 자주 들으면 익숙해진다.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장에는 거의 매번 엄마들보다 기자들이 많다. 한 번 왔던 기자들은 안다.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에 오면 예상을 넘는 발언들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지난 2년 동안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앰프 들고 가서 사회만 보았다.

정치하는엄마들에는 토론회 참여나 인터뷰 요청, 기고 요청이 많다. 처음에는 (내가 공동대표일 때) 공동대표님이 와주시면 안 되냐고 묻는 기관들이 많았다. 나는 그럴 거면 정치하는엄마들은 참석 않겠다고 일축한다. 나보다 더 잘할 엄마들이 많다는 걸 나는 확신하지만, 그들은 아무 엄마나 (검증 안 된) 와서 이야기하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 엄마들이 무지해서 토론회의 격을 떨어트릴까봐 그런 것일까? 또는 내가 전직 국회의원이니까 다른 토론자들과 급을 맞추고 싶어서일까? 뭐든지 간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고, 정부부처나 국회 토론회에 가서 발언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의 방침은 한결 같았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활동가들이 하는 말을 한 번 들으면 다음에는 나한테 연락하지도 않는다. 그에게 바로 연락한다. 우리 중에는 그런 활동가가 많다.

지난 화요일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발표했는데 지난 1년 간 전국 스쿨미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스쿨미투 트위터 계정, 1년간의 언론보도를 검색해서 86개 학교의 스쿨미투 현황을 망라했다. 이 자료는 교육부도 어디도 갖고 있지 않은 자료다. 이걸 무급 활동가 2~3명이 다 했다. 비리유치원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곳이다.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상근 활동가 두 명이 120\*120 짜리 책상 하나에 앉아 이렇게 많은 일을 벌일 수는 없다. 우리는 SETI@home 프로젝트처럼 일한다.

우리는 서로를 언니라고 부르고 서로에게 높임말을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 나이, 학위 등 불필요한 위계 발생요소들이 지워진다. 그래서 말하는데 내면의 장벽, 외부의 장애가 사라지고 점점 스스로의 발언권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의 토론이 제대로 된다. 민주주의는 관계의 문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다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

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런 곳이다. 리더 또는 리더쉽이 부재한 곳이다. 리더가 많으면 리더가 아니듯, 엘리트가 많으면 엘리트가 아니듯. 당사자인지 활동가인지 그런 구분도 별로 의미 없는 곳이다.

## 토론3

### 정형화된 조직 체계가 아닌

### 솔루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 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운동적 배경 및 의의

-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페미니즘 리부트
- 이미지 기반 성착취 대응의 공백

#### 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운동적 성과

- 사이버성폭력 전문 피해지원 프로세스 개발
- 웹하드 카르텔 대응 및 공론화
- 산업화된 성착취에 대한 담론 형성
-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부서 신설
- 정책 개선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 해외 서버 불법포르노사이트 산업 축소

#### 3.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운동적 이해

##### <기초편>

- 운동의 기본은 ‘신념’ 과 ‘철학’ 으로 이루어진 관점을 통해 행한다.
- 기초편 습득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 배우기 어렵다.

- 운동은 개인의 이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운동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다.
- 운동을 변증법적이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부숴야만 새로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운동은 분노를 모아 변화가 가능하도록 조직화하는 것이다.
- 목적이 같으면 방법이 달라도 같이할 수 있지만, 방법이 같더라도 운동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께 하기 어렵다.
- 타협이 불가능한 지점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 기초편은 운동의 기본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운동의 영역이 달라도 배우거나 가르쳐 줄 수 있다.
- 배우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도제관계가 아니라 선후배 관계처럼 같이 행하고 같이 배우는 관계로 즉, 운동적 동지를 뜻한다.
- 운동에는 선생님이 없고 선배나 동지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운동은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존재할 수 없다.
- 좋은 운동적 동지이자 선배를 만나야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다.
- 운동적 어머니가 있어야만 운동가로서의 탄생이 가능하지만 그 어머니의 것을 변증법적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중급편>

- 중급편은 조직으로서의 운동, 조직차원의 정치, 그 실천적 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 즉 중급편은 여성운동의 현실정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여성운동에 관한 경험과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의 영역이 다르면 그 영역의 중급편을 풀 수 없다.
- 기초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현실정치부터 시작하면 다시 운동철학을 세우는 단계로 돌아가기 어렵다.
- 중급편부터 시작하면 기초편으로 되돌아가지도, 고급편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멈춘다.
- 조직운동이 그 자체로 정치화되고 조직운동이 살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조직운동의 파워는 대중에게서 나온다. 대중운동으로 대중을 움직여야한다.
- 세대 운동의 결실은 그 세대 자체를 조직화하여 대중운동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 세대 자체를 운동적 주체로 주체화해야 한다.
- 정치세력화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고급편>

- 고급편의 운동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을 열 수 있다.
- 쉽게 보거나 상상하기 어렵다.
- 한 영역에서의 혁명적 전환을 이룰 수 있다.
- 시대가 바뀌면 깨우쳤던 고급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고급편의 방법적 실천은 개인이 아닌 조직화 된 단위가 해낼 수 있다.
- 조직이 운동을 이끌어도 주요한 동력은 대중의 주체화에 있다.

#### 4. 발제문을 읽고

발제문은 활동가로서 시민사회 지형의 다양성과 현재 시민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볼 기회를 주었다. 분배와 인정을 다룬 파트에서 여성운동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발제문의 기본적인 운동적 전제가 여성운동과 다르다는 것이 짚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해당 발제문은 3가지 요소를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 말했지만 여성운동의 축은 다르게 구성될 것이다.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된 지점이 여러 지점 있었지만 전문가 조직을 지향하고, 회원의 기부자 역할과 같은 나쁜 역할분담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다. 한사성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이 문제 지점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배움 뒤,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 계획하게 되었다.

- ① 조직 차원 : 산업화된 이미지 기반 성착취에 대응
- ② 회원 차원 : 회원들이 후원뿐 아니라 직접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③ 시민 차원 : 회원이 아닌 대중 페미니스트들이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함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개발

자원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솔루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그 지향과 방법에 있어 한사성은 위와 같은 고민들을 거쳐 왔다. 3년차 단체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마주한 과제는 또 새롭다. 비전과 미션을 새로 정립하고 있고 새로 들어온 팀원들의 활동가 정체화도 남았다. 올해 초, 높은 탑이 아니라 넓은 방주와 같은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운동이란 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고 탑이 아닌 배에 올라타 항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Memo

## 토론4

### 정형화된 조직 체계가 아닌

### 독립활동가의 형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우성희 | 독립활동가의 시대 활동가

#### 1. 나

나는 몇 년 전 시민사회연구소에서 그만두고 독립연구자가 되었다. 이전 직장에서 했던 연구나 기획하는 일 등을 혼자 하거나, 그 때 그 때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하기도 한다. 연구도 하면서 내 관심사에 대한 활동(팟캐스트 제작, 모임, 글쓰기 등)도 했다. 2년 전에 독립러(‘독립 활동가’, ‘독립 노동자’ 무엇이랴 불러야 할지 애매해서 이하 그냥 ‘독립러’라고 칭하겠음)가 되었다.

독립러가 된 후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직장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도 좋다. 시키는 잡다한 일 보다는 집중하고 싶은 분야의 작업을 소신대로 할 수 있다. 조직에선 남의 일을 해주는 입장이었다면, 독립 후 좀 더 당사자 입장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도 좋다.

단점도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과 외로움이다. 단순히 별이가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다. 통장 잔고가 ‘0’이 뜨는 위협은 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일은 하는데 늘 쪼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일감이 적어서 일 수도 있고, 단가가 낮아서일 수도 있고, 일한 대가가 언제 입금되는 지를 예측하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생존할 최소한의 돈이 입금된다면 지금과는 매우 다를 것 같다.

또한, 종일 컴퓨터만 보고 앉아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일을 논의할 동료가 있을 때의 든든함과 성장하는 기쁨이 그리웠다. 차츰 직장이 맺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케미’가 맞는 좋은 동료들 스스로 찾아 일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다방면의 좋은 동료들과 일하면서 얻는 성장이 내게 가장 큰 보상임을 깨달은 후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할 동료들 찾아서 작업한다.

종합하면, 시간이나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좀 더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여러 단점보다 크기 때문에 독립러의 삶을 지속한 것 같다.

## 2. PJT “독립활동가의 시대”

하다보니 외롭고 고충도 있어서 나와 처지가 비슷한 동료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동시에 우리같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독립러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 정체성의 애매함이 우리만 겪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보였다. ‘알바’, ‘백수’, ‘프리랜서’, ‘학생’ 등으로 대충 불리지만, 분명 여기저기에 불려다니면서 자기 전문성을 갖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지 곤란해 하는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아보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알아보게.” 라는 막연한 질문을 가지고, 2017년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미트쉐어 사업을 이용해서 ‘독립활동가의시대’ 라는 모임을 제안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https://parti.xyz/p/enhancers>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independentplayers/>





### 3. 독립활동가는 누구인가

“독립 활동가, 1인 연구자, 프리랜서, N잡러, 백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독립 연구자와 활동가 모여라” 라는 소개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독립러’ 라는 호명에 반응하여 모여들 지가 궁금했다. ‘아이디어 디렉터’, ‘선물 아티스트’ 처럼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이들도 있었고, 백수나 학생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은 독립러로 살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독립러가 되고 싶은 직장인과 대학생,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도 있었다.

# 온전히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자 독립적으로 활동: 10년째 1인 활동가로 살고 있는 독립러는 과거 시민단체에서 일했는데, 단체의 메인 이슈 외에도 관심이 많고 일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예를 들어 여성, 인권 등) 단체 활동가로서는 주어진 한 가지 주제로만 일해야 하는 것이 아쉬워서 1인 시민활동가가 되었다. 하고 싶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한다.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감을 받아서 돈을 벌기도 한다. 개인 후원을 받기도 했다.

# 조직이 별로라서 독립활동가: 시민단체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후, 알던 분들과 프로젝트 몇 개를 하기도 하고 알바를 받아서 하다보니 사람들이 독립 활동가라고 불러주더라. 나와서 보니까 독립 활동가들이 많더라. 스스로는 적극적으로 독립활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마음에 맞는 조직이 있다면 일하고 싶으므로 일시적으로 독립활동가인 상태라고 생각한다.

# 사이드 프로젝트 독립활동가 지향: 월-금동안 일하고 주말이나 저녁에는 친구들과 하는 환경 활동도 오랫동안 해왔다. 조직에 속해도 독립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별로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인 ‘빠띠’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최근 1년간은 활동이 뜸했는데, 그런데도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매주 두 세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서 신기했다.

올해는 독립러 기획단이 모여 ‘독립러 생존 가이드’를 제작하기로 했다.

### 4. 독립러라는 현상

독립러라는 호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독립러의 발

생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발생한 어떤 현상이거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변화를 정의할 순 없지만,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 독립러는 어떤 사람들인가? 독립러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스스로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일감을 받아서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고유의 목표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 그 때문에 불안정한 수입과 노동 조건을 감수하고 독립러를 선택하는 이들이 모였고.
- 사회변화로 인해 독립러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첫번째 오프라인 모임 후, 한 참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배운 게 다양한 우리가 설 수 있는 직업적인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독립러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렇기에 청년실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독립러를 위한 사회적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 독립러는 기성세대의 시스템에서 ‘탈출’ 한 이들인가? 세 번째 모임에 참여한 독립러가 이렇게 말했다. “공익 기관과 단체, 중간지원조직의 관료적이고 경직된 시스템에서 젊고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갈 곳을 잃고 ‘유실’ 되어 독립러가 되었다” 고. 마찬가지로 비싸고, 좁고, 늙은 상아탑의 길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은 연구자들은 점차 독립 연구자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독립러는 기존 시스템의 낙후를 배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독립러를 접근할 때 기존의 직업 구조와 문화의 혁신에 대한 고민을 동반해야 한다. 그러니 부디 독립러를 ‘힙한’ 사람들로 소비하고 정책적 성공 사례로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 독립러들은 ‘억울하면 몸집을 키워’ 라든지 ‘업계에서 이름난 권위자가 되도록 해.’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권력과 자원이 독점되지 않고, 그 권력에 편승하지 않아도 신규 진입자가 동등하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새롭고 자기답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직은 각자 생존하기에도 벅차지만, ‘각자 성장한 후 나중에’ 가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만들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긍정적 변화? vs 시민사회 위기 현상?

긍정적 변화

- 환경 변화: 시민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 미디어, 온 오프라인 플랫폼 등 조직이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시민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 시민사회 활동이란 무엇인가?: 시민활동이 곧 시민사회 단체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1인 활동가들은 기존 시민단체의 의제나 활동방식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과 방법을 아우르는데,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행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시민사회’라는 단어/프레임 뿐 아니라 ‘공익활동’, ‘비영리’, ‘사회혁신’, ‘체인지 메이킹’, ‘활동가’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 직접 행동하는 시민들: 시민 사회가 전문가 의존적(“일반 시민회원들을 대신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발언을 해주고, 시민들은 그저 회비나 내고 박수나 쳐주는 구조로 ‘나쁜 역할분담’이 되는 경우”)이라고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문제를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등장을 1인 활동가 확대에서 볼 수 있다.
- 1인 활동가와 조직화: 1인 활동가들은 ‘혼자’ 활동한다기보다, 다양한 개인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기존 시민사회 단체와 다른 방식으로 개인들을 조직하는 주체로서 1인 활동가가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 위기현상

- 1인 활동가 중에는 기존 단체들의 활동과 조직문화를 차마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도 많으므로 기존 시민사회 단체의 위험 징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활동가로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개인은 아름답지만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 1인 활동가의 활동이 시민사회 생태계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1인 활동가들의 활동이 연결되고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Memo

## 토론5

###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권력'과 이들이 활동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권오현 | 슬로워크 대표, 빠띠 설립자

서울시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서울” 총괄기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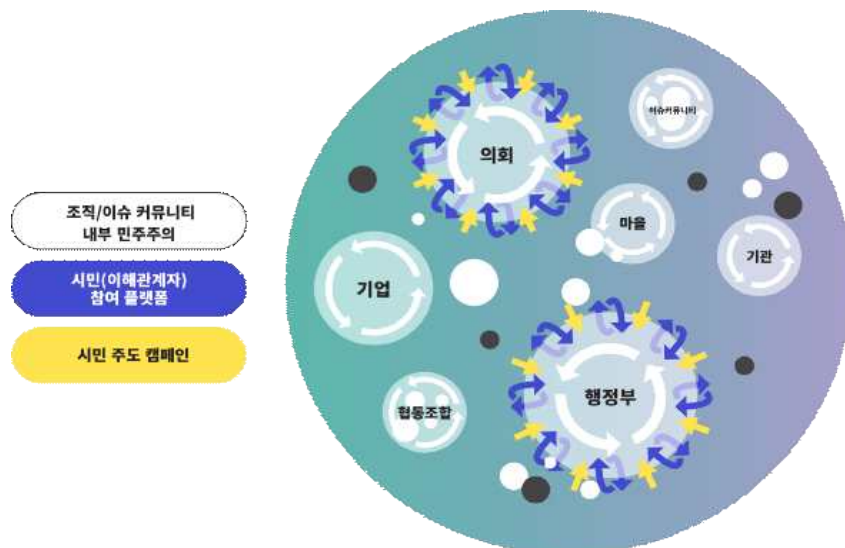
- 기술 활용에 뛰어난 초연결된 대중은 신권력으로 등장함.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제레미 하이먼즈 )
  -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직접 운동의 등장,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세대의 등장
  - 미디어를 소비하듯 가볍게 의견을 내고, 특정 이념이 아닌 관심을 두는 개별 이슈에만 반응하는 대중의 등장
  -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개인의 이슈와 관심사 중심, 일상 속에서 일상과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의 민주주의, 젠더 갈등 등 사회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며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함. 촛불집회를 경험한 대중은 민주주의의 열망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국가 뿐만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도 도전을 받는 대상이 됨.
  - 이들로 인해 조직은 더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요구받고, 기업은 더 많은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표방해야 하고, 정부는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음.
-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인터넷을 통해 나타나는 갈등의 심화와 왜곡, 책임지지 않는 의견을 표출하는 등 무책임하다는 비판이거나, 혹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권과 자율,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며 기존 정치와 기존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양극단으로 나뉨.

- 현재까지 발전한 인터넷 기반의 기술은 협업과 숙의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태생적인 한계를 지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협력을 위한 기술은 부재함.
- 소통을 넘어 분권, 협치를 기반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에 접목하기에는 수많은 기술적인 과제와 정책적인 과제가 존재함.
- 현상을 비판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보단,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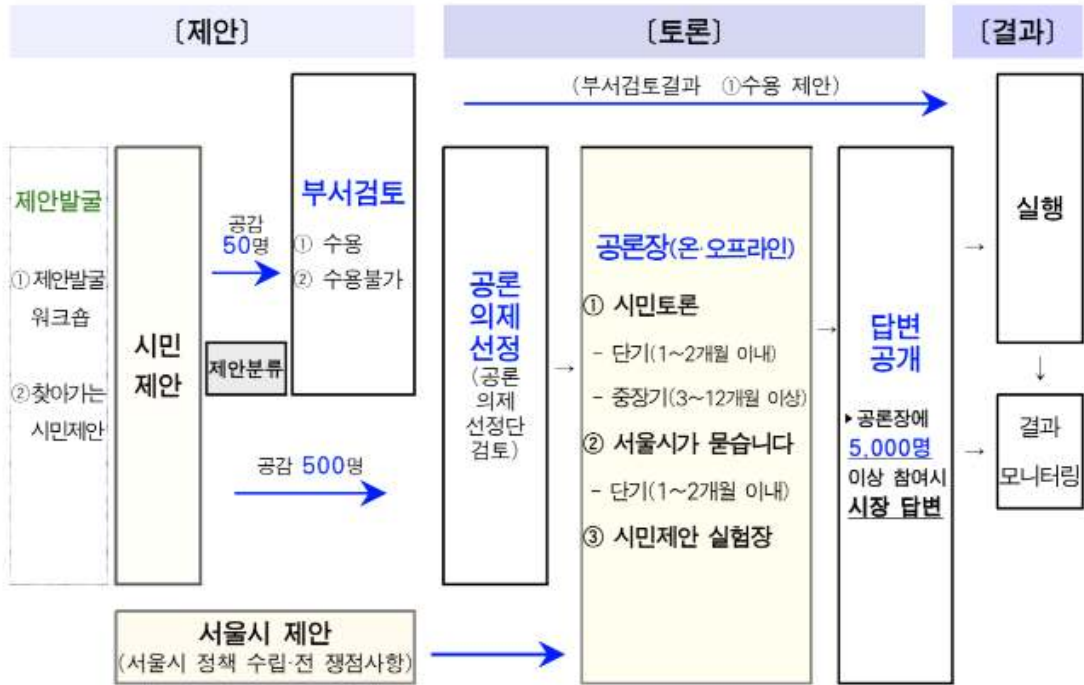
### 자율적이며 포용적이며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 ● 시민들이 활동할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 거버넌스 모델 개발이 필요함

-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작은 커뮤니티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 매스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 공론화 프로세스와 신뢰받는 공론장이 없는 상황임.
- 기본적으로 자치와 협력의 경험이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나고 발전되어야 함. 다양한 공론장 실험이 일어나도록 복돋고 그 경험이 공유되도록 해야 함.
- 특히 정부는 시민이 제안, 실험, 공론화, 공동 결정에 참여하는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운영 방식도 혁신해야 함.



<그림 2> 층위별로 작동하는 소통과 협력 모델, 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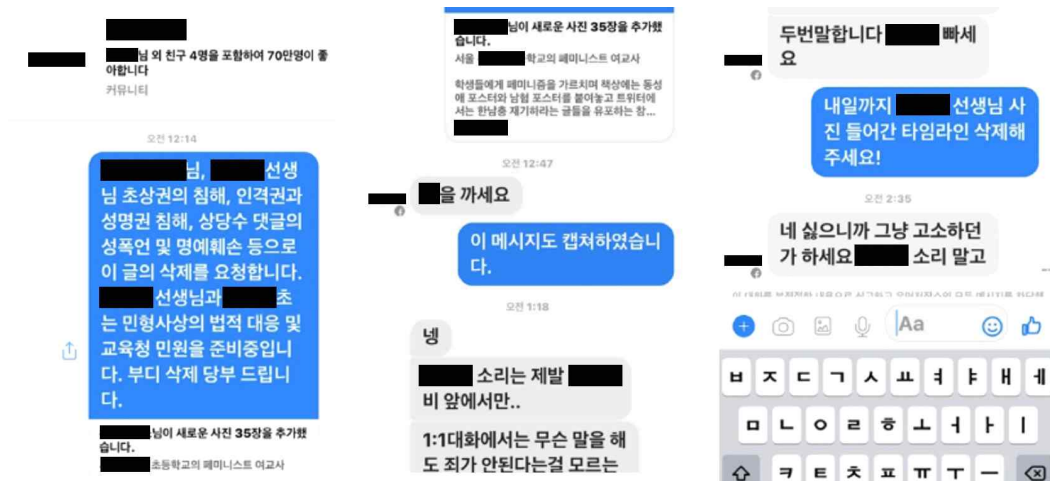


<그림 3> 제안을 공론화하는 과정과 이를 운영하는 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둔 민주주의 서울

● 시민들이 협력하는데 필요한 기반 기술과 제도 마련을 시작해야 함

- 온라인 상에서 의견을 내기에 안전한가? 온라인 상에 표출된 의견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 다수가 신뢰하는 데이터가 있는가? 다수가 신뢰하는 매스 미디어가 있는가? 의견을 주고 받고, 갈등과 이견 조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나 정책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도 충분히 준비되고 있지 않음.
- 공공 데이터 확대,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와 신뢰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플랫폼, 온라인 상의 젠더 폭력에 대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대표성과 신뢰도를 가진 시민 참여를 위한 기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나 국가는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분절적으로 진행 중임.
- 안전하게, 정확하게, 협력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술과 제도 마련을 시작해야 함. 특히 이 기술은 시민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 i. “정부가 자기만의 비전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기술 주권(technical sovereignty)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세웠다. 기술을 소수 기업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할 수 있었다.” - 우버와 플랫폼 기업에 관한 솔츠 교수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중



<그림 4> 페이스북 상에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페이지 운영자와의 대화

• 거버넌스 모델, 기술, 제도 개발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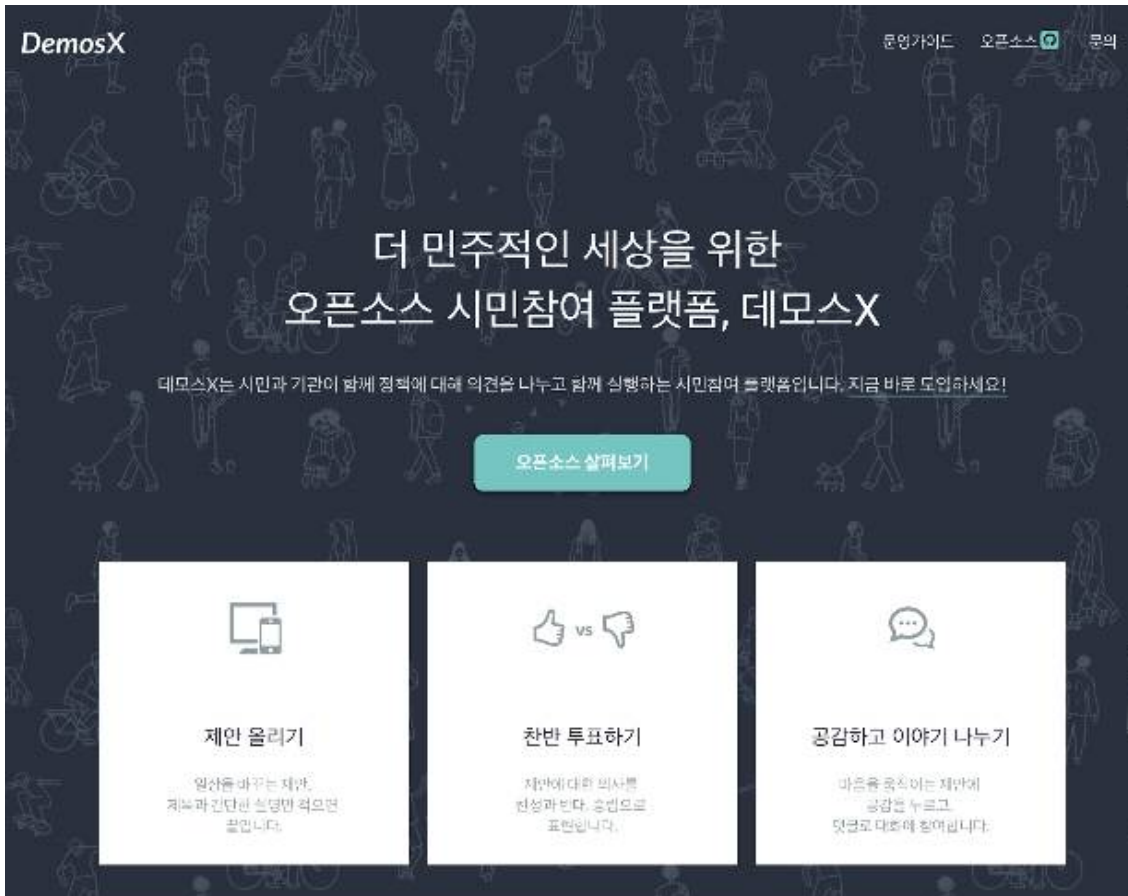
-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분절적인 해답을 각자 내어놓기보다는 정부나 시민 사회의 노력과 경험을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인프라로 여기고 공동의 해답을 찾아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함.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모두를 위한 안내서



<그림 5> 빠띠의 시민입법, 시민토론 등의 민주주의 오픈소스 툴킷





<그림 6> 서울시와 빠띠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소스와 운영 가이드

협력과 신뢰를 위한 기술을 사회의 주요 인프라이자 자체 생태계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 캐피털인 와이콤비네이터는 2017년에 민주주의, 언론,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고 공표함.

<https://blog.ycombinator.com/rfs-news-jobs-and-democracy/>

유럽위원회는 2012년부터 The CAPSSI initiative ( Collective Awareness Platforms for Sustainability and Social Innovation )를 운영하며 지속가능성과 사회혁신을 위한 달라진 시민 참여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 펀딩, 플랫폼 개발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음.

Memo

## 토론6

### 시민단체의 생성, 성장, 소멸, 전환

- 시민사회단체 조직형태 변화의 경험,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례

김태호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주)나눔발전소 대표이사

#### <주문 내용>

1. 전통적인 의미의 조직형태 시민사회단체 조직에서 출발하여  
공익적 기업이라는 조직의 형태로 전환한 경험
2. 새로운 조직형태로의 전환 계기?
3. 성과와 도전

### 1. 발제 의견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로 시민사회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싸움을 걸어 나가지 않는 한 시민사회는 자신의 존립 자체를 지키기 어려울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운동, 그것은 시민사회의 생존권 투쟁이라고 볼수 있다(김병권).

김병권 자문관의 단정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 발제자에 누가 되지 않게 첨언하자면, 신자유주의 또는 극단적 자유시장경제구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형평성 있는 혜택을 함께 누릴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가기 위한 전환의 과정 속에 우리 시민단체가 있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 한계와 그로부터 파생된 이슈에 대하여 어떤 주제와 방법으로 시민단체가 운동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해보인다. 즉, 참여연대 등이 하고 있는 운동방식들, 또는 같은 맥락의 다른 운동방식, 아니면

다른 주제의 같은 운동방식....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다.

시민운동의 지향점이 전세계, 전지구의 평화와 환경, 인권, 자유 등 거대담론이 된 지 오래지만 단체의 생존방식은 아직 구시대적이라는 비판 또한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대안이라 할수도 없고, 아직 성공한 대안도 아니지만 에너지나눔과평화의 사례로서 그 가능성을 조심스레 진단하는 것도 의미 어 보인다.

## 2.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라! 대안을 찾아서,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운동 개요

### ○ 설립 목적

2006년 설립한 에너지나눔과평화(Energy Peace Foundation, EPF)는 지구온난화와 빈곤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단체이다.

### ○ 목표

1GW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원전 1기를 대체하고, 1천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며, 1천만명의 빈곤계층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 ○ 사업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태양광발전소인 나눔발전소(Sharing Solar Power, SSP)를 직접 운영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세계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금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둘째, 세계 에너지빈곤층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즉 지원수단 또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고효율 가전제품이다. 셋째, 타 NGO와 기관의 재생가능에너지 확산 운동을 지원하고, 동일 목적의 시민을 교육하며, 정부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 ○ 실현방안

하나, 나눔발전소(SSP)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금은 시민 모금과 은행대출을 활용한다. 이렇게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 그 수익으로 제3세계의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는 활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SSP는 아

직까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유일한 프로그램이기에 이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가급적 조속히 만들어 확대한다. SSP의 전력판매 수익의 50%는 한국과 세계 전역의 빈곤층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추가적인 SSP를 설치하는데 재투자한다. 그리고 어떠한 배당도 하지 않는다.

하나, 에너지빈곤층 지원활동은 한국과 제3세계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전기없는 학교’, 그리고 ‘전기 없는 병원’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빈곤가구에게는 ‘고효율에너지 가전제품’을 지원하여 깨끗한 에너지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나,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는 타 NGO나 지방정부들에 관련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적인 현장 교육을 실시, 태양광발전소의 자금조달, 설치, 운영, 유지보수 등 일련의 준비와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열정은 있으나 투자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가 그들이 필요로한 투자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향후 이를 체계화한다.

하나, 비영리인 에너지나눔과평화의 SSP 투자사업구조는 투가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축이 비영리 내부에서 SSP 영리사업이 한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특수목적법인은 4개이며, 이 각각의 법인 안에 21개의 발전소가 배치되어 있다. 현재까지 활동가 수는 6명(상주)이며, 외부 엔지니어가 2인,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발전소 조직도, 지원사례, 발전소 현장, 설치 등 보려면> [www.ep.or.kr](http://www.ep.or.kr) 참조하세요

### 3. 전환 계기

#### <문제의식>

- 외부의존적 재정으로는 우리의 사업이 아무리 옳더라도 지속가능하기 힘들다.
- 우리의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우리 스스로 재화를 만들 기업활동이 필요하다.
- 기업활동은 그 자체로 공익적 내용의 사업이어야 한다.

#### <행동전략>

- 시민단체의 기업활동은 시장과 공정경쟁하여야 한다.

- 지분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안되면, 따라서 배당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임원은 여신을 제공할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 최초 투자가 후속 투자를 만들어낼수 있는 레버리지 확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기 문제의식과 행동전략은 다음의 풀어쓰기를 참고하면 보다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첫째, SS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비영리인 NGO가 빈곤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외부의존적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는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는데 SSP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공익적 기업의 사례와 성공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대안적 경제모델이라 자신있게 부를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의 활동은 환경을 보전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이며, 이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사업이다.

넷째, 영리사업의 모든 지분이 비영리인 EP가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은 각계 전문가가 모인 EP의 이사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배당은 없으며, 배당 대신 빈곤층을 지원한다.

다섯째, 투자 시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과정에서 대표자는 물론이거니와 이사는 이를 지급보증할 수 있어야한다. 이사진은 은행 차입금을 빌릴 때, 상환에 인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이러한 EP의 혁신은 시장의 문제점을 공익적 투자사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우리사회에 제시해준다. 우리사회는 지금 함께 사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공유경제’이며, 하늘로부터 기업이 부여받은 기업가치의 최종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EP가 제시한 혁신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4. 성과

### ○ 나눔발전소 설치, 운영

이제, 지난 13년 동안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한 EP의 활약상과 성과

는 다음과 같다. EP는 지난 2009년, 1호기 210kW의 SSP를 탄생시킨 이래, 2018년까지 총 21기 7,000kW(1천만kWh 전력생산, 2500가구에 전력상시 공급, 온실가스 연간 4,000톤 저감)의 SSP를 설치, 운영하고있다. 이는 2018년 기준, 한국내 NGO와 협동조합의 총 재생에너지 보급량 6,704.6kW과 유사하다.

### ○ 소외계층 지원실적

2011년부터 시작한 국내 지원사업의 경우 4,424빈곤가구, 아동청소년 1,120명, 16개 시설을 지원하였고, 해외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 몽골과 베트남내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8개 학교, 1개 병원 등을 중심으로 1개교당 3-6kW급의 풍력태양광 병합형 발전기를 지원하여 청정전력을 공급, 삶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때문에 약 60,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비가 오거나 해가 지면 어두워져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했던 불편을 덜고 밝은 전등불빛 아래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이러한 지원사업의 금액은 누적 25억원에 이른다.

### ○ 성공사례 제시

시장경제의 대안적 모습으로서 공익적 기업운영의 성공사례를 구체 모델로 제시, NGO의 외부의존적 지원금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동 모델 제시, 7MW 나눔발전소 운영을 통한 향후 25년간 300억원 이상의 순익창출과 이를 통한 150억원의 빈곤지원, 150억원(자본 150억원, 총투자 1,500억원, 100MW) 재투자 가능.

## 5. 도전

- 비영리의 영리지분 5% 제한 조치는 문제가 있다. 비영리가 이 이상의 지분을 가진다면, 증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현행법이다. 집단지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영리단체가 100% 지분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기 힘들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겪이다. 그래서 빈대는 다 잡았는가.
- 제3세계 지원사업은 현지 스포터스가 필요하다. 예산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현지 파트너를 세워우고 이를 잘 관리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EP가 지난 5년 동안 해외지원사업에서 얻은 성공모델 중 핵심은 지원한 발전시설 등을 잘 관리할수 있는 파트너 관리에 대한 노하우이라 할수 있다. 이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코이카 등과의 협력하여 노하우의 공유도 필요하다.
- 사업의 다양화, 레버리지 분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는 시행착오를 겪지말고 쌓인 결과물은 한꺼번에 얻어

가야 한다. 현재, 새로 시작하는 몇몇 단체는 시행착오로 노하우를 만드려는 경향이 있다.

- 진짜 따라하기가 아닌 가짜 모방(대기업, 국가기업)과 한시적 인기사업(지방정부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 공익사업의 여신제공자가 절대 부족하다.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펀드를 활용할 줄하는 투자 챔피언이 무수히 양성되어야 한다.